'24년 경찰공무원(경정, 경감) 정기 승진시험

- 2교시(11:30 ~ 12:50) -

목 차

【형사소송법(경정)】	-----	1
【경찰행정법(경감)】	-----	3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1) 甲이 개인사업주로서 경영하는 X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乙이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리수술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P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 및 범행 기간 내 수술실 CCTV 영상을 압수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압수·수색영장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판사의 서명·날인란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영장 집행 당시 이를 알지 못한 P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甲과 乙이 참여한 가운데 ①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을 압수하였다. 이후 P는 乙을 소환하여 신문하였고, 압수한 ①을 바탕으로 ②乙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P는 며칠 뒤 X병원에서 2023년 10월 20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았던 A로부터 'X병원의사 丙이 자신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P는 乙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압수한 증거 ①에서 丙의 의료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X병원을 방문 하였으나 丙은 부재중이었다. 전화상 丙으로부터 진료실 출입허락을 받은 P는 진료실 책상 위에서 丙이 개인적으로 ③A의 수술 CCTV 영상 중 주요장면을 출력해 놓은 사진 10장을 발견하였고, 이를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하였다. 다음 날 P가 丙을 피의자로 소환하자,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한 丙은 신문 전에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④丙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담당검사는 丙을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위 ①, ③, ④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丙에 대한 증거는 ①, ③, ④가 전부였다. 공판기일에 출석한 丙은 법정에서 ④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백하면서 제출된 증거 모두에 대해 증거동의 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실관계 (1)에서, P가 행한 압수·수색은 적법한가? (5점)
2. 사실관계 (1)에서, ①, ②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3. 사실관계 (2)에서, 법원은 丙의 법정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20점)
4. 사실관계 (2)에서, ④에 담긴 丙의 진술을 통해 甲이 CCTV의 관리·감독에 소홀하였음을 확인한 검사는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 甲을 기소하면서, ④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공판기일에 출석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④에 대해서 증거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도 부인하였다. 그러던 중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던 丙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④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5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5점)
2. 함정수사 (25점)

<참고조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목 : 경찰행정법(경감)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甲은 자신이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할 A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乙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하는 등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A경찰서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A경찰서장은 甲의 민원을 계기로 乙에 대한 내부 감사(이하 '이 사건 내부 감사'라 함)를 실시하면서 乙로부터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 함)를 제출받았다.

甲은 A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A경찰서장은 甲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A경찰서장이 甲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 (15점)
2. 甲이 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집행정지'는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3. 만약 甲이 제기한 위 취소소송이 인용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에 대한 이 사건 내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A경찰서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가? (20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행정상 강제집행 (30점)
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0점)

<참고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